

제15차 한국-미국서부 전략포럼  
토론 보고서

2015. 11. 17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Stanford**  
Walter H. Shorenstein  
**APARC** Asia-Pacific  
Research Center

# 포럼 개요

■ 일시 : 2015. 11. 17 (화) 09:30~18:30

■ 장소 : 세종연구소 소회의실

## ■ 프로그램 및 주제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창수 소장 개회사</li> <li>박준우 이사장 환영사</li> <li>신기욱 교수 환영사</li> </ul>
1회의 동북아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 토마스 핑거 미국 스탠포드대 석좌연구위원</li> <li>한국의 대중국경사론                      • 한·중·일, 한·일관계</li> <li>남중국해 문제</li> </ul>
2회의 북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li> <li>북한 안정성 및 경제 평가              • 북·중관계 변화</li> <li>북핵, 대북정책 관련 입장              • 한반도 통일 문제</li> </ul>
3회의 한미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li> <li>한미동맹 균열 논란                      • 사드 배치 문제</li> <li>한국의 TPP 가입                          • 한미동맹 강화 방안</li> </ul>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 진창수 세종연구소장</li> <li>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li> </ul>

## ■ 포럼 참가자

### ● 한국 참가자 (13인, 가나다순)

1. 김성철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외교전략연구실장  
Soung Chul KIM (Director, Diplomatic Strategy Studies, Sejong Institute)
2. 김성한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Sung-han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3. 김우상 : 연세대학교 정치학 교수  
Woosang KIM (Professor,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4. 김흥규 : 아주대학교 정치학 교수  
Heung-Kyu KIM (Professor, Political Science, Ajou University)
5. 김희상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Hee Sang KIM (Chairma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6. 박준우 : 세종연구소 이사장  
Joon-woo PARK (Chairman, Sejong Institute)
7. 백학순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교육연수본부장  
Haksoon PAIK (Chief Director, Education and Training Division, Sejong Institute)
8. 유명환 : 세종대학교 이사장, 전 외교부장관  
Myung Hwan YU (Chairman, Board of Directors, Sejong University)
9. 이상현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구기획본부장  
Sang Hyun LEE (Chief Director, Research Planning, Sejong Institute)
10. 이태환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국센터장  
Tai Hwan LEE (Director, China Studies, Sejong Institute)
11. 진창수 : 세종연구소장  
Chang Soo JIN (President, Sejong Institute)
12. 최대석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 교수  
Dae Seok CHOI (Professor, Politic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3. 최영진 :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Y.J. CHOI (Distinguished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미국 참가자 (10인, abc순)

1. Michael H. Armacost

Distinguished Fellow, Shorenstein APARC, Stanford University

2. John Chu

Senior Military Fellows, LTC(P), US Army

3. Karl Eikenberry

Distinguished Fellow, Shorenstein APARC, Stanford University.

4. Thomas Fingar

Distinguished Fellow, Freeman Spogli Institute, Stanford University

5. Joyce Lee

Research Professional, Korea Program, APARC, Stanford University

6. T.J. Pempel

Professor,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7. Gi-Wook Shin

Director, Shorenstein APARC, Stanford University

8. Daniel C. Snider

Associate Director for Research, APARC, Stanford University

9.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PARC, Stanford University

10. David Straub

Associate Director, Korea Program, APARC, Stanford University

## ■ 대화 원칙

- 대외 비공개 및 익명성 보장 (Chatham House Rule)
- 발표없이 토론
- 큰 테마 아래 다양한 주제 논의
- 시간제한 1인당 5분 (질문과 토론)

# 포럼 내용 요약

## ■ 동북아 정세

- 동북아 역내질서는 현상유지를 고수하려는 미국과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구도 속에서 양 거대세력 간의 갈등이 노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세력우위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며 아울러 미·중 관계는 경제적 이해 공유 등 기본적으로 상호의존관계이므로 세력경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형점(equilibrium)을 찾아 나갈 것임.
- 박근혜 정부가 미·중 균형외교를 표방하며 전통적인 한·미관계 중심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이른바 대중국경사(leaning toward China)를 보이고 있다는 일본의 선전과 이에 영향을 받은 미국내 일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측은 ‘한미동맹 우선, 한미관계 중심’ 원칙하에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함.
- 한국의 균형외교(balanced diplomacy)와 관련, 균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의 균형자론(Korea's role as a balancer)을 연상시키며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미·중간 기계적 균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한국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균형있게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비대칭적 의미의 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남중국해 문제는 영토와 주권 차원을 넘어서 중국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원칙을 위반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침해화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긴장국면이 심화될수록 미·중은 물론 주변국들 모두에게 큰 부담과 피해가 가중될 것이므로 양자적·군사적 접근보다는 다자적·경제적 해법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한일관계 현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간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며, 한일간 직접적 양자대화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다자적인 틀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관계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북한 문제

-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낮고 북한경제 역시 소폭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같은 추세가 얼마나 장기적인 지속성을 보일지는 의문스럽고, 결국 한·미가 어떻게 대북 관여에 나서느냐, 또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함.
- 김정은의 잦은 군 인사조치는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군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북한체제를 지탱해 온 국가폭력이라는 전통적인 통치수단도 상당히 무력해 졌으며, 최근에는 북한 정보부서에서 대외로 유출되는 내부정보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 통제력이 한계상황에 다가가고 있는 현상이 관측됨.
-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추구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작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로 지속가능한 평화가 목표이며, 경제적 협력에 의한 경제공동체가 가능하면 그것이 바로 작은 통일이고, 통일대박론은 작은 통일 이후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 즉 큰 통일로 가는 이상형을 제시한 것임.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의 속도를 어떻게 둔화시키느냐 여부가 관건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방식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정책조율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호 우선순위와 대응방향 등에 걸쳐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통일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이므로 한국정부가 너무 의욕을 앞세우기 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한·미간 전략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한미 동맹

- 한·미 양국 간에는 상호이익, 우선순위, 정책선호가 다른 여러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서로의 공동노력으로 간극을 조정하면서 여러 한·미 현안들이 잘 타결된 바, 현재 한·미간에 큰 균열이 있다고 믿지 않고 동맹관계의 장기적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을, 중국과는 협력을 추구하는 외교적 상황에서 중국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우려사항이 중요하지 않으면 쉽게 풀릴 것이고 만약 실질적인 고

려사항이 있다면 한·중간 논의를 진행해 봐야 함.

- TPP가 반중국 무역협정이 아니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이지 않아서 결국은 모두가 서로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한미간 정책공조에 있어서는 동맹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후 과정에서는 양국간 방법론과 접근법이 다소 다르더라도 각국 정책당국에서 더 여유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 군사·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도 동맹관계를 연결시키는 보완적인 활용법을 찾고 동맹의 궁극적인 최종상태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주요 토론 내용

## 1. 동북아 정세

### (1) 동북아 역내 질서

- 동북아 역내 질서와 안보 역학은 현상유지를 고수하려는 미국과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구도 속에서 양 거대세력 간의 갈등이 노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미 전문가 대부분의 공통된 평가임.
  - 이와 같은 동북아 역학의 특징은 미·중간 힘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그리고 중국이 느끼는 현상에 대한 불만족도가 커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패권국과 신흥국 간의 필연적 충돌을 뜻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토론 과정에서 피력됨.
- 미국의 세력우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란 견해와 아울러 미·중관계는 경제적 이해 공유 등 기본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이므로 세력경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형점(equilibrium)을 찾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됨.
  - 그 근거로는 최근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군사·안보·문화 분야 및 주요 가치와 제도 측면에서 미·중간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패권적 대외확장을 시도하지 않았고, 또한 현재 중국과 주변국 간의 교역 및 인적교류의 규모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음.

### (2) 한국의 대중국경사론

- 박근혜 정부가 미·중 균형외교를 표방하며 전통적인 한·미관계 중심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이른바 대중국경사(leaning toward China)를 보이고 있다는 일본의 선전과 이에 영향을 받은 미국내 일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측 전문가들의 반론 및 설명이 있었으며, 미국측 참석자들은 이해를 표명함.
- 한국측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우선, 한미관계 중심’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한·중관계는 최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함.
- 한국의 균형외교(balanced diplomacy)와 관련, 균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의 균형자론(Korea's role as a balancer)을 연



상시키며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 이것이 미·중간 기계적 균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한국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균형있게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비대칭적 의미의 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함.
- 한국측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한국, 대중국경사’ 이미지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각이 미국 조야와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확대되는데 우려를 표시함.
- 미·중 갈등 속에서 민감한 위치에 처한 한국으로서는 박 대통령의 방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박 대통령 개인적 입장에서 상호신뢰가 두텁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미국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후 설명을 하는 편이 좀 더 마음 편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미국측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음.

### (3) 남중국해 문제

- 최근 첨예한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한·미 양측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중국이 남서부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표면화된 것이며 동북아 질서 및 현상의 변경과도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인 원인과 대응에 대해서는 양측 전문가들 간의 비판적 의견교환이 있었음.
- 미국측 전문가들은 동 문제가 영토와 주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원칙을 위반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규정함.
- 미국은 이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련의 군사 기동을 포함해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함.
- 미국은 지난 10월 말 문제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주변 12해리(약 22km) 근해에 해군 이지스함 USS 라센(DDG-82)을 파견한 바 있으며,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11월 초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를 타고 남중국해 인근을 항행한 바 있음.
- 미·중 모두 이 문제에 걸린 이해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최근 양안 관계 개선 움직임 등 긍정적 요소의 존재 때문에 미·중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함.

- 미국이 직접 한국에게 항행의 자유 지지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 법적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한국과 같은 주요 무역국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내해처럼 취급하면 한국도 큰 손 해를 보게 되는데 왜 동 원칙에 대한 지지를 직접 강력히 표명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함.
- 이에 대해 한국측 전문가들은 한국은 그간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혀왔고 명확하게 표현 수위도 높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 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전략적 관여(commitment) 의지와 강도에 대한 의구 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함.
  - 한국을 비롯해 상대적 약소국인 주변국들로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결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환영할 수 없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 국면이 얼 마나 지속될지 또 얼마나 강하게 나갈지 확신할 수 없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대중 화해로 전환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에 부담이 있음.
  -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유엔해양법은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핵 없는 세계란 이상을 제시하며 강력한 비확산체제를 강조하면서도 포괄적핵 실험금지조약(CTBT)을 거부하고 있는 등 스스로 논리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함.
- 최근의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이 너무 늦게 개입하고 중국은 너무 일찍 야심 을 드러냄에 따라 미·중 모두 전략적 실수를 범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평가 도 제기됨.
  - 이 지역이 중국의 일방적 지배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주변국은 없을 것 이란 점에서 미국이 진작 조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관여에 나섰다 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 중국 역시 최근 경제둔화 및 부패문제 등 내부적 상황의 부담으로 인한 돌 파구 필요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악화를 감수하고 모험적인 행동에 나선 것 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이 응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오판한 데 따른 실 수로 보인다고 평가함.
-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긴장 국면이 심화될수록 미·중은 물론 주변국들 모두 에게 큰 부담과 피해가 가중될 것이므로 양자적·군사적 접근보다는 다자적·경제적 해법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 (4) 한중일 3국 관계

- 미국측 전문가들은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동북아 긴장 완화 및 역내 문제 관련 3자 협력 추진에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큰 성과였다고 환영의 뜻을 표함.
- 미국측 전문가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일본 아베 총리의 의도와 군사적 능력, 중·일 경쟁 등의 문제에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의 소위 군사대국화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일본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속에서 의회의 견제가 존재하며, △자위대 역할 및 교전규칙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현재 일본의 경제 여건 및 법규상 군비지출 확대가 어려우며, 특히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적절히 관리될 것임.
  -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은 미국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음.
  - 미국으로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 제7함대의 호위 역할 수준에 머무르기를 기대함.
-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미국도 일본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해결 방침이 제시된 만큼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이와 같은 미국측 견해에 대해 한국측 전문가는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한·일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일본에게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측의 움직임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성의가 부족해서 당분간 한일관계의 극적인 개선 가능성은 밝지 않다고 진단함.
  - 일본 총리실 내부 분위기로 판단컨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가 별로 없고, △일본 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 한국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란 생각이 강해 한·일 협상에 소극적이며, △일본 국민들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부정적인 전망의 근거로 제시함.
  - 일본은 위안부문제 협상에서 소위 한국이 해결조건(goalpost)을 변경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이번 협상이 최종이라는 보장을 해달라는 등 먼저 스스로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국측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함.

- 한국측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지난 8.15 담화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본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사·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아베 총리뿐 아니라 그간 여러 일본지도자 및 정치인들의 도발적 발언이 빈번히 이어져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불신도 뿌리 깊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풀리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밝힘.
  -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며, 한일간 직접적 양자대화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다자적인 틀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을 해볼 것을 제안함.
-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중국·일본과 미국이 다자적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북아에서 경제안보협력체를 구성하면 다가올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 한국이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긴요함.

## 2. 북한문제

### (1) 북한내부 정세 평가

- 북한내부 정세 평가와 관련, 한·미 양측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 유지와 경제여건 개선 등에 대해 뚜렷한 차이 없이 대체로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지만, 일부 평가와 향후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음.
- 한국측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진단과 함께 경제여건, 주민생활, 군부동향 등 대내적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여부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외견상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하고, 김정은 정권이 특별히 불안정하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음.
- 김정은은 정책조율과 대중동원 능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때문에 수령의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한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시스템에 의한 통치로의 이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음.
-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향후 북한이 좀 더 신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예측할 수는 없다며 확대 해석이나 낙관적 전망에 대해 경계함.

#### <북한의 경제상황>

- 김정은 집권 이후 장마당(시장) 확대와 농장 운영 개선 등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국내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의 집권 시기보다는 내부 경제여건이 개선된 모습이 여러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WFP)의 곡물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은 최근 수년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금년도 식량사정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뭄이 오래 지속된 여파에 따라 내년도 식량사정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경제가 최근 1%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장마당거래 등 실물시장의 드러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면 적어도 연간 3-4%의 성장 추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한경제가 실제로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됨.
- 경제여건 개선 덕분에 김정은의 리더십이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

하면서, 향후 북한이 보다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여지는 있지만 전면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우선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입대체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 관료·군부의 동향>

- 북한 정부는 관료들이 지극히 부패되어 있고 사기도 매우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효율적인 국가통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 집권기에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왔던 군부 역시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동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함.
  - 김정일의 잦은 군 인사 조치는 일견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결국 군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함.
  - 결국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국가폭력이라는 전통적인 통치수단도 많이 무력해졌으며, 최근에는 북한 정보부서에서 대외로 유출되는 내부 정보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 통제력이 한계상황에 다가서고 있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음.
- 미국측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적 여건의 개선 추세에 관해 대체로 비슷하게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측을 덧붙임.
- 金正일이 생각보다 빨리 권력 공고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놀라움을 표시하고, 이는 군부 중심의 국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북한은 경제특구 확대 지정 등 다양한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과거에 매우 제한적이고 조심스럽게 시험하던 모습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함.
  - 金正일 정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미디어 활용의 변화를 꼽았는데, 김정일 집권기에 비해서 각종 대중매체를 대내외 선전에 이용하는 빈도와 정도가 높아졌고, 특히 내용 면에서도 주의 깊게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의 매체 활용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미국측 전문가는 당분간金正일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낮고 북한경제 역시 소폭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같은 추세가 얼마나 장기적인 지속성을 보일지는 의문스럽다며, 결국 한·미가 어떻게 대북 관여에 나서느냐, 또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라

고 밝힘.

## (2) 대북한정책 입장

- 한국측 전문가는 대화와 압박의 동시 사용을 추구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은 공히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지 않으며 상호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가동되는 것임을 설명함.
  -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작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목표이며, 경제적 협력에 의한 경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통일이라고 설명하고, 통일대박론은 이러한 작은 통일 이후에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 소위 큰 통일로 가는 이상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가. 북핵문제

- 한국측 전문가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그간 벌여놓은 시간을 활용해 핵능력 고도화(소형·경량화) 및 미사일 사거리 연장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역학구도의 판도를 바꿀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음.
  - 최근 한·미 모두 북핵문제에 관한 긴박감에서 이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른바 전략적 인내란 이름 아래 방치하는 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음.
  -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관여나 봉쇄든 명확한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측 전문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의 문턱을 넘어설 만큼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추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21세기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김정은도 자신 만의 업적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핵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미국측 전문가는 그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과 대화·협상을 시도하고 국제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한 결과, 북핵 프로그램을 지난 10년간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고 핵능력 고도화를 둔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님을 강조하며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

성에 대해 동의함.

- 북핵·미사일 고도화의 속도를 어떻게 둔화시키느냐 여부가 관건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방식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정책조율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호 우선순위와 대응 방향 등에 걸쳐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나. 대북한 제재

- 한·미 양측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에 많은 맹점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제재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특히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국제공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수출입을 해주고 식량·에너지를 제공함에 따라 제재 효력이 크게 반감된 바 있다고 지적함.
- 제재만으로는 의도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제재와 대화를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대북 관여에 나서야 할 것이란 점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음.

#### 다. 대북한정책 추진 방향

- 미국측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도 했고 미·북간 선순환적인 관계발전을 기대하며 2012년 2월 Leap Day Deal을 맺는 등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합의 직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신뢰가 사라지고 말았으며 따라서 점차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 미국은 북한이 정말 진지하게 비핵화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사표명이라도 있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으나, 북한은 그런 의도가 거의 없어 보므로 당분간 현재와 같은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한국측 전문가는 북핵문제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며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너무 핵·미사일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미 당국 및 조야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북한·북핵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3) 북·중 관계의 변화

- 한국측 전문가들은 최근 북·중관계가 과거처럼 긴밀하거나 공고한 상태에 있



지 않고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 서도 중국 지도부의 근본적인 대북인식 변화 여부 및 한·중 또는 미·중간 북 한문제 관련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각을 보였음.

- 한국측 전문가는 중국의 관점에서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불안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으며, 북핵문제 역시 점차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파견하면서 이런 우려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관측했음.
  - 중국 지도부는 2014년 10월 이후 ‘더 큰 당근과 더 강한 채찍’이라는 대북 전략을 채택하고, △식량·에너지 지원 등을 모두 끊는 방안, △북·중간 동맹 조약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된 한·중우호협력조약을 한국과 맺는 방안, △그 간 북·중간 맺은 각종 비밀 내용들을 공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북압박 조치들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미국측 전문가는 경제적으로 북·중간 교역 움직임과 물동량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나, 북한 김정은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으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기대보다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음.
  - 이는 중국 당국 및 민간업자들도 북한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대북투자에 선뜻 나설 중국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한국측 전문가는 중국이 현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을 북한에 보낸 것은 악화된 북중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에 따른 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음.
  - 중국 원로정치외교의 관행에 비춰 볼 때, 사실상 중국 지도부의 대북인식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중국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반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 표현 고수, △북핵문제 해 법으로 6자회담 재개 주장 등이 근거.
- 한국측 전문가는 이러한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금이 북한문제 관련 한·미·중 3자 협력을 추진하기에 좋은 상태라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 검토를 한·미·중이 함께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음.
  - 아직까지는 한·중간 신뢰가 부족하고,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능력 및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본격적인 3자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됨.

#### (4) 한반도의 통일 문제

- 한국측 전문가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과거에는 중국에서 통일논의 자체를 공개하거나 수용한 바 없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통일논의를 의제로 수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중 관계의 일대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북한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가 있음이 분명하며, 양 정상간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수준의 통일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
  - 중국의 외교용어 및 개념을 통해서 판단할 때 북한은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지역에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보다 낮은 중대이익(vital interest) 지역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차이점이 한·중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주장함.
- 통일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이므로 한국정부가 너무 의욕을 앞세우기 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한·미간 전략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한미동맹

#### (1) 한미동맹의 균열 논란

- 최근 한·미관계가 역대 최상의 관계인지 또는 모종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이른바 한·미동맹 균열론에 관해 토론을 벌임.
- 한국측 전문가는 일부 당국자가 한미동맹은 역대 최상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에 근본적 균열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맹관계의 기본인 양국간 신뢰가 확실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음.
  - 과거 한·미 관계가 역대 최악이었다고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양국 당국자들은 늘 동맹이 최상이라고 했다면서 이런 수사적 표현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으면 안 된다고 주장.
  -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문제와 국제규범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러한 직설적인 이야기를 영국 캐머런 총리는 물론 여타 동맹·우방국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부연.
- 미국측 전문가들은 그간 한·미 양국 간에는 상호이익, 우선순위, 정책선호가 다른 여러 문제들이 존재했었지만 서로의 공동 노력으로 간극을 조정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왔다고 강조했다.
  - 그간 여러 한·미 현안들이 잘 타결된 바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한·미간에 큰 균열이 있다고 믿지 않지만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맹관계의 장기적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언론으로부터 동맹 균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놀란 표정이었다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그런 평가는 옳지 않다고 일축함.
- 한국측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데는 한국측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함을 인정했음.
  - 동맹이란 기본적으로 상호지원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월남전 이래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한국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과연 기여해왔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 한국이 한미동맹과 미국의 안보공약을 당연시하고 적극적 관계강화 노력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던 점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함.
- 한국측 전문가는 국가간 이익과 우선순위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실제로 매우 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러한 측면을 오해하고 지나치게 확

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음.

- 한 전문가는 중국이 최근 미국의 동북아 동맹에 대한 흔들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가 사안별로 느끼는 긴박감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서 중국이 한·미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함.
- 시진핑 시대 중국은 과거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벗고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구상과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및 제도에도 중국의 이익을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
- 미국과 군사적 측면에서 직접적 충돌을 피하는 대신 경제, 문화 등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복안을 추진.
- 중국은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면서 이를 견제할 의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

## (2) 사드(THAAD) 배치

- 미국측 전문가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사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지적했음.
-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신뢰할만한 억지력이 되는데,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PAC-3) 체계로는 부족하므로 사드 (THAAD)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
- 미국으로선 한국도 이러한 억지력 개념 변화에 맞춰서 주한미군에 상응하는 작전능력과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사드의 본질은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점이며, 따라서 중국이 사드 도입·배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
- 한국은 무엇이 스스로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입장 표명과 전략적 선택을 주문.
- 한국측 전문가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는 동맹을, 중국과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의 우려사항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쉽게 풀릴 것이지만 만약 뭔가 정말 실질적인 사항이 있다면 한·중간 논의를 진행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한·중간 논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에게 설득하고 용인 받으려는 것이라

기보다는 이와 같은 논의를 하나의 절차로서 소진시킴으로써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해 당부.

- 미국측 전문가는 미국 역시 유럽에 MD 배치를 추진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 때문에 거의 10년에 달하는 시간을 소모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측의 대중국 설득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함.

### (3) 한국의 TPP 가입

- 한국이 TPP 협상에 불참한 배경에 중국 의식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측 참석자는 결코 중국 눈치 보기나 기타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일련의 판단 지연과 실수가 겹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 TPP 논의가 부상하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 때는 한미 FTA 비준에 정치적인 자산을 너무 많이 사용한 나머지 TPP에 대한 충분한 국내적 논의를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 2013년 5월 미국이 마지막 최후통첩성 초청을 했을 때에도 신정부 출범 초기 정부개편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적절한 정무적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함.
- 미국측 전문가는 TPP가 결코 반중국 무역협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이지 않다면서 결국은 모두가 서로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함.
- 한국측 전문가는 한국의 TPP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서 밝힌 만큼 미국측 전문가들도 한국을 적극 도와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음.

### (4)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

- 한국측 전문가는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한국이 그간 많이 발전하면서 한·미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생겼으며, 중국문제가 끼어들면서 한·미간 기대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또 한·미 양국의 국내정치에서도 이런 기대차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관찰했음.

- 한·미 일각에서 너무 자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조정해가야 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일본이 주변국의 우려가 큰 안보법제를 강행 통과시켰을 때나 아베 수상이 교묘한 수사로 과거사 인식을 얼버무리고 최대당사국인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내용의 종전70주년 담화에 대해서 미국이 즉각 환영논평을 낸 것은 주변국의 입장을 배려치 못한 처사라고 비판.
- 한·미·일 삼자협력이 원만히 복원되게 하기 위해서도 미국측이 일본의 행태에 대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들의 큰 기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측 전문가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하지만, 미국이 글로벌 시각을 가진 반면에 한국은 지역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또한 양국이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완벽히 일치할 수 없지만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동맹도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 양측 전문가들은 한미관계가 좋다는 총론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점들이 많으며, 양국간의 정책적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온도차가 있어서 논의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슈들을 현명하게 다루기 위해 조율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음.
- 정책공조에 있어서는 동맹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후 과정에서는 양국간 방법론과 접근법이 다소 다르더라도 각국 정책당국에서 더 여유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 군사·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도 동맹관계를 연결시키는 보완적인 활용법을 찾고 동맹의 궁극적인 최종상태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
-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양국간 다차원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간 정부간 대화는 양국이 서로 너무 가깝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1.5 트랙 차원의 공공외교의 장에서 보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측 전문가들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였음.

## 4.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한·미 전문가들은 최근 동북아의 역학구도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패러독스로 총칭되는 역내 갈등 양상이 여전한 가운데 한·미 관계에 부담을 주는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모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협력의 여지가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역내 협력이 가능한 분야들을 발굴하는데 한·미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음.
- 현실적 관점에서 미·중 경쟁구도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자기실현적 예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미가 함께 이런 문제를 예방·극복하는 전략적 숙제를 푸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컨센서스를 이루었음.

### (2) 정책제언

- 한·미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포럼 논의를 통해 양국이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한·미간 적극적인 공공외교(1.5 Track)를 통해서 양국 입장의 이른바 부적합(mismatch)을 해소해야 함.
  - 한미동맹의 온도차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협의와 조율 노력을 강화해야 함.
  -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한미동맹에 갖고 있는 큰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다 사려 깊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미국의 안보제공에 상응하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한국은 노동집약적 군사력 구조를 기술·자본 집약적 군사력으로 변화시켜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능력을 강화시켜야 함.
  - 한·미 양국 모두 건전한 경제력을 가졌으므로 그간 군사·안보 측면에 치우친 동맹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간섭 내지 견제에 공동 대응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 동맹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교정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함.
- 미국이 대선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이어 한국에서도 대선이 있는바, 향후 2년 정도는 양국 모두 국내정치 일정에 따른 영향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의제 관리와 입장 조율에 신경을 써야 함.

끝



- 작성자 : 김성철 수석연구위원
- 기록자 : 박준성 객원연구위원
- 작성일 : 2015년 11월 30일